

“군 부제자투표 부정은 있을 수도 없지만 확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부정사실을 이렇게 전면 부인해온 국방부의 ‘끈질긴 은폐’ 노력은 결국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이원섭(21) 일병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런 지경인데도 국군통신사령부 대리투표에 대한 국방부의 이른바 진상조사 발표문을 보면 군의 은폐와 축소 ‘의지’

가 곳곳에 드러나 있다.

이 발표문은 장황한 내용이다. 한결같이 ‘제보내용과 상이하다’ ‘군을 이해 못하는 소치’ 등의 결론을 일방적으로 내려 군 투표부정을 민간의 오해 탓으로 돌렸다. 그나마 통신사와 관련한 일부 사실 인정은 끝부분에 간략히 ‘부정의 의도는 없었으나 선거법을 위반한 중대장 등 3명을 구속수사중’이라는 한 구절을 보탤 뿐이다.

특히 “원거리 소파견지의 통신중계소 근무요원들은 중대로부터 2백~4백리 이상 떨어져 있는 험준한 산악고지에 근무하고 있어 근무공백 우려와 시간이 촉박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대리투표가 행해졌다”는 대목은 국방부의 발표의도 자체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대리투표사병 6명 모두가

사병만도 못한 국방부의 ‘용기’

중대본부에서 차로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파견을 나가 있고 다른 5명도 근무지가 진해로 ‘험준한 산악고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군의 공명선거 의지만 있었으면 해당사병들이 충분히 오갈 수도 있었는데도 국방부는 이처럼 거짓 발표를 한 것이다.

이 일병의 지적처럼 파견을 보낸 해·공군부대에서 책임지고 부제자투표 업무를

계 관리했다라면 이런 투표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일병 자신도 부정사실을 폭로하면서 “부제자투표를 100%를 무리하게 채우려다 보니 파견부대에서 다른 부대 소속 병사의 투표업무 떠맡기를 꺼린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아쉬워한 바 있다.

국방부는 또 기자들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이 일병의 소속 중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 채 이 일병 사건과 무관한 포항·울산 파견자들의 사례만을 언급하는 ‘졸렬함’을 보였다.

부정사실을 ‘마지못해’ 일부 시인하면서도 끝까지 여론을 호도하려 한 국방부의 자세를 보면서 군 관계자들이 ‘작대기 두개’인 일병보다도 용기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서글픈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다.

〈부산=이수윤 기자〉

〈한겨레 1992.4.16〉